

## 보험사기 알선·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.

### -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
- ①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
- ②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
- ③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
- ④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
- ⑤ 보험사기 죄를 범할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

보험사기 알선·광고 행위 금지·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(이하 보험사기방지법)이 1.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
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·인원이 증가<sup>①</sup>하고 조직적·지능적 보험사기<sup>②</sup>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.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,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·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- ① 적발 금액 / 인원 : ('17) 7,302억원 / 8만 3,000여명 → ('22) 1조 818억원 / 10만 2,679명
- ②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, 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,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(예: 영상물 게시) 등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보험사기의 **알선·유인·권유** 또는 **광고 행위**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.

둘째 금융당국의 **보험사기 조사권**을 강화하여 보험사기 및 알선·유인·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**관계기관에 고발·수사의뢰** 등 후속조치를 보다 **효과적**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·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·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.

셋째,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**입원적정성심사\***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**심사기준**을 마련하도록 하였다.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\*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

넷째, 보험사가 **자동차 보험사기**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**피해사실** 및 **후속절차\***를 고지 하는 **피해구제 제도**를 **법정화**하였다.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.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.

\*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환급, 할인·할증 등급 조정 등

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·금융감독원·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·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진 (02-2100-2967)